

한라포커스 인구절벽에 직면한 제주

## “맞춤형 인구정책·실현 절실”

작년 자연증가 28명 불과... 마이너스 성장 우려  
 출산 장려·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책 마련 시급

제주인구의 자연증가가 '0(제로)'에 근접, 인구절벽에 직면했다. 특히 매년 출생아 수 급감으로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출산장려는 물론 이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과 청년·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맞춤형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 '데드크로스' 인구절벽 현실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182만9023명을 기록, 전년보다 2만838명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제주를 포함 경기, 세종, 강원,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가 1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지난해 제주인구의 자연증가 수도 28명에 불과하다. 4014명이 태어났고, 3986명이 숨졌다. 2019년 4545명이 출생했고 4030명이 사망하며 자연증가한 515명에 견줘 1년 세

도 확연하게 줄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도내 자연증가 수는 2015년 2260명, 2016년 2001명, 2017년 1304명, 2018년 890명, 2019년 515명 등으로 증가폭이 가파르게 좁혀지고 있다. 지역경제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제주 유입에 대한 악재 요소가 여러 겹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인구는 67만4635명으로 1년 동안 3645명 늘었다. 5년 전인 2015년 한 해 동안 1만7049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21% 수준으로 격세지감이다.

▶ '세대별·이주민 맞춤형 정책 필요'=최근 도내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인 미래 성장동력을 잃는 것과 직결한다.

실제 최근 출생아 수 추이는 2015년 5678명에서 2018년 4861명에 이어 지난해 3986명이었다. 불과 5년 만에 30%가량 줄었다.

코로나19가 들어닥친 지난해 4월(-11명)과 10월(-42명)에는 월별 자연증가 수가 되레 감소한 사례도

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제주 유입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미래전략 연구위원은 "제주인구 특성상 자연증가가 매년 줄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비롯해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 타지역 인구 유입정책 등을 통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변화 및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제주출신 청년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배류되지 않도록 우수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역시 중요하다"며 "또한 제주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제주정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이주민에게 필요한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 시행 사업과 함께 올해 신규로 출산장려를 위한 '1천만원+Happy I' 정책 및 청년업(業)토크링(창업+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마스크를 쓴 눈사람 11일 제주시 한라수목원 내에 마스크를 쓴 눈사람이 오가는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지역 과도한 택배비 부담 줄어줄까

위성곤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 지역에 과도하게 책정되는 택배비에 대한 도민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서비스에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에 국가가 물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1일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에

대해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비에 대한 도민 불만이 높아지면서 제주도는 최근 한 달간 도서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 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코로나 극복 상반기 예산 4조5160억 푼다

도, 재정집행률 92%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키로  
 일자리·SOC사업 등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주력, 재정집행률 92%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선순환 구조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속도 있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재정집행률 90.9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89.93%를 0.99%p 앞서며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목표치는 92%로 역대 최고치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도는 BSC(통합성과관리시스템) 가점제와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1-6월)에 세출예산현

액 6조2722억원(예산 5조8299, 이월 4423억원)의 72%인 4조5160억 원을 배정한다. 특히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더불어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백금탁기자

## 먹거리 체계구축·유통혁신 역량 집중

제주도, 4대 전략과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농촌, 식품·축산 분야에 총 2390억원을 투입해 농업·농촌 활력, 먹거리 체계구축, 유통혁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축산식품분야 정책 목표인 '제주농업 변화·혁신으로 농촌

경제 활력화'를 위해 4대 전략과제 및 16개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1366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확대 지원,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

한다. 또 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인력증가센터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농산물 유통혁신과 수급안정을 위해 373억원을 투입해 농업·복합산업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인프라 구축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주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화를 위해 51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태윤기자

한살림제주는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자연과 더불어 농업과 생명을 살리며  
 사람이 더불어 사는 제주를 지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 제2공항

# 반대

제주를 지키는

“슬데어시 공항짓지마라”  
 #제주를\_지키자

다가오는 찬반 여론조사에 “반대한다”고 답해주세요